

북한의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에 관한 연구

-북한신문 기사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Period-Based Study of North Korea's Utilization of Whale Resources

- A Content Analysis of North Korean Newspapers -

장한별*·이준영**

Jang, Hanbyeol · Lee, Joonyoung

목 차

- I. 서 론
- II.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 III. 연구방법: 북한신문 내용분석
- IV. 북한의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
- V. 토론 및 결론

Abstract: North Korea had engaged in whaling for several decades until the 1980s, impacting whale resources in East Asian waters. However,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examine th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s that North Korea has built with whale resourc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North Korean newspapers to explore the changing utilization patterns of whale resources in North Korea. Analyzing 138 articles spanning from 1957 to 2021, we found that North Korea engaged in whaling between the 1950s and the early 1970s. While relevant articles did not appear between 1974 and 1999, they began to reappear after 2000 with different focal points compared to the earlier period. Specifically, recent articles no longer document North Korea's past whaling records. Instead, they emphasize whales as part of the global commons, criticize Japan for its continued whaling activities, and advocate for sustainable whal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Research

* 제1저자, 템플대학교 지리·도시연구학과 박사수료, hanbyeol.geo@temple.edu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소상공인경제생태계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jyoung0523@gmail.com

findings call for more attention to be paid to examining North Korea's role in shap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whale resources in East Asia. Furthermore, North Korea's recent realignment towards advocating whale conservation suggests that whales could serve as an effective platform for maritime cooperation with other concerned countries.

Key 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Newspapers, Whale, Whaling, Commons

I. 서론

1. 서론

한반도 주변 해역은 과거 많은 고래들이 회유하거나 서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동해는 해안가에서 고래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을 만큼 고래가 많아 경해(鯨海)로 불리기도 하였다(여민경, 2010; 정인철, 2014).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풍부한 고래자원은 조선 후기 서양 포경선들에 의한 고래잡이(포경) 조업이 시작된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제국 포경선들에 의해 많은 남획이 이루어졌다(박구병, 1995a, 1995b).

고래를 둘러싼 이러한 역사지리적 궤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 고래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 지역의 고래 이용에 대해 충분한 학문적 시선을 비추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국가 간에 설정된 해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해양 공유재인 고래에 대한 기존 국내의 연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부로 영역적 프레임을 한정시키고 그러한 틀짓기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경향성은 해양 공유재를 둘러싼 한정되고 선택적인 지리적 이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의 이용·관리를 둘러싼 다면적인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어렵게 한다(Dalby, 2000; Song et al., 2017). 광범위한 해역을 회유하는 해양포유류인 고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고래자원 이용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 중심의 고래자원 이용논의에서 벗어나,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과 고래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들을 결부시켜 접근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먼저 본 연구는 북한 내부적으로 고래자원이 갖는 위상과 의미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에 주목함으로써, 북한이라는 정치·경제적으로 특수한 국가적 맥락에서 고래자원의 이용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수산업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과 결부시켜 북한의 고래자원 이용의 시기별 변화의 함의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고래자원을 둘러싼 해양협력논의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진입점을 제공한다. 북한의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을 분석하는 것은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동아시아 고래자원 관리·보존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북한이라는 중요한 행위자를 부각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북한의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수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의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의 특성과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둘째, 한국의 고래자원 이용논의에 북한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해양 공유재의 관리와 보존의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II 장에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존 문헌들의 학문적 격차를 확인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II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북한신문 기사의 내용분석 방법을 기술하였다. IV 장에서는 최종 추출된 북한신문 기사들을 세부 주제별로 분류하여 고래자원의 시기별 이용에 대한 특징과 그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V 장에서는 서론에서 제기된 연구 질문들과 연계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요약과 함의로 결론을 구성하였다.

II.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1. 북한의 수산업 관련 연구

북한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수산업 관련 어항들이 발달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동해안 항구도시인 청진 일대의 해역을 중심으로 정어리 어업이 성업하였는데, 생

산된 정어리는 일제의 산업적 목적(군사, 화학)으로 활용되었다(심재욱·하원호, 2017; 심재욱·이혜은·민원기, 2017). 1937년을 기준으로 정어리는 일제의 전체 어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단일 어종 생산량으로서는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였다(남성욱, 2006; 심재욱·하원호, 2017).

해방 이후 수산업은 북한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한 당국은 내수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업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정권 초기부터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였다(남성욱, 2006). 포경업은 북한 당국이 관심을 가졌던 수산업의 주요 부문 중 하나였다(양희철 외, 2018). 포경업이 북한 수산업의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으나 포획된 고래 개별 개체의 압도적 크기와 무게가 주는 상징성은 북한 정권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선전, 주체적 수산업 발전 등의 서사를 전달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북한 포경업의 발전은 수산업 전반의 발전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의 고래자원 이용 특성과 변화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 수산업의 발전계획과 그 실천의 시기별 특징과 같은 넓은 틀 안에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관련 문헌들은 주로 시기별, 지도자별로 계획 및 실행된 수산업 진흥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수산업이 북한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내·외부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북한 수산업의 도입기, 발전기, 전성기, 쇠퇴기 등의 시기별 구분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남성욱, 2006; 진희권·윤인주, 2019; 김종화, 2019).

김종화(2019)는 북한의 전체적인 경제발전 계획의 틀 안에서 수산업의 발전단계를 시기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시기의 주요 수산정책과 어획 목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채수란(2022)은 1945-1960년을 수산업 제1기, 1961-1976년을 제2기(성장기), 1977-1984년을 제3기(전성기), 1987-1998년을 제4기(침체기), 1999-2011년을 제5기(회복기)로 구분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서의 수산업 변화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외의 문헌들에서도 시작 연도, 종료 연도의 시기별 근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한 수산업 발전단계 분석을 제시하였다(장창익, 1993; 남성욱, 2006; 진희권·윤인주, 2019). 수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의 고래자원 이용을 검토한다면 시기별로 구별되는 특징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북한 수산업을 이해하는데 수산사업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수산사업소는 북한 수산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 노선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데 중요한 가늠자의 역할을 해왔다(황주희·윤인주, 2022). 수산 정책의 세부실행사업들은 수산업의 전진기지인 수산사업소들과 직간접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김중화, 2019). 뿐만 아니라 수산사업소의 중요성은 북한 지도자들의 현지지도¹⁾ 방문지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홍민, 2018; 안진희, 2020; 황주희·윤인주, 2022).

마지막으로 국가 간 협력의 관점에서 북한 수산업을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경계 왕래성 어족자원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수산자원을 둘러싼 남북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한 연구들에서는 한정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남북 수산자원 협력이 지니는 잠재력과 기여점들을 제시하였다(장창익, 1993; 남성욱, 2006; 홍성걸 외, 2008). 심호진(2009)과 김하영(2013)은 개별국가 단위에서 어족자원 고갈 문제에 접근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산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간 다자간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 북한의 시기별 포경 기록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포경역사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북한 해역에서 이루어진 포경 활동을 부분적으로 소개, 언급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박구병(1995a)은 조선 후기 서양 포경선들이 조선의 해역까지 내어하여 북한 지역 해안가에 상륙한 것을 서양 포경선의 항해일지(log book)와 고문서 기록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박구병(1995b)의 “한반도연해포경사”에서는 포경 활동이 이루어졌던 북한 지역의 주요 항구와 선단의 규모에 대해 기록하기도 하였다.

1897년을 기준으로 러시아는 동해안의 신포항과 장전항을 기점으로 포경선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장수호, 2004), 1899년 조선 정부는 현재의 북한 지역인 강원도 장진포, 함경도 진포도를 러시아 태평양포경회사에 포경근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도

1) 현지지도: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경제의 ‘걸린 부분’을 풀거나 ‘모범창출’을 통해 생산동력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정치적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지는 통치수단” (홍민, 2018, p.2)

하였다(김백영, 2013; 최중기, 2019). 러시아에 의해 설치된 한반도 최초의 포경기지가 북한 지역에 존재했다는 것은 고래자원 이용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던 러시아의 지정학적 교두보로서 북한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조사된 일본제국의 포경업에 대한 보고서는 1907년경에 일본이 운영 중인 포경기지로 현재 남한 지역인 울산과 거제도와 더불어 북한 지역의 장전, 신포를 기록하고 있다(Terry, 1950). 북한 지역이 한반도의 포경 역사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북한수역에서 서식, 회유하던 고래 개체수가 그만큼 많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전 시기의 문헌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 중북부 해역(특히 동해)은 조선 후기부터 북서태평양의 풍부한 고래 개체군을 쫓아온 서양 포경선에 의한 고래잡이의 주무대였으며,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상업포경의 중요한 기점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수산업 진흥을 주요 경제발전 과제로 삼았던 북한 정권의 정책 노선을 미루어 볼 때, 일제강점기 포경 활동이 해방 이후 북한에서도 전개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38선 이북에서 어떻게 고래자원이 이용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한 연구들은 드물었다. 고래자원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논의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적 틀 안에서 자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포경 활동을 조명하였으며, 관련 연구들은 과거 대규모 포경기지가 운영되었던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지역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Li, 2013; 허영란, 2014; Choi, 2017; Tatar, 2017).²⁾

예외적으로 몇몇 연구들이 해방 이후 사회주의체제 북한의 수산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포경업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 수산업 전반의 현황분석에 대한 장창익(1993)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수산업 생산기반을 설명하면서 “포경선은 원산, 청진, 김책, 신포 등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동해 근해에서 돌고래를 잡으며 20여척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급하였다(장창익, 1993, p.351). 양희철 외(2018)는 1950년대 북한 수산 과학연구의 성과로서 포경업과 곱등어(돌고래) 어로방식의 도입을 소개하며 이 새로운

2) 예외적인 연구들: 일제강점기 대흑산도 포경업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이주빈, 2017),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포경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박구병, 1995b)

어로방식이 어족자원 생산량 증대에 기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는 북한의 해역별 해양자원 이용과 접근을 분석하면서 동해, 서해의 주요 고래 어장, 어기, 포경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양희철 외, 2018). 그러나 전술한 선행연구들은 고래 자원 이용을 주요 연구 문제나 연구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북한 수산업의 일부로서 간략히 언급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 문헌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북한의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III. 연구방법: 북한신문 내용분석

북한의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을 연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북한신문 기사의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은 북한 자료 접근이 제한되는 여건에서 북한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자주 채택하는 연구방법이다(장덕희 외, 2018; 황주희·윤인주, 2022; 진희권·윤인주, 2019). 북한신문들은 북한체제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정해진 지침과 규범을 준수한 기사만을 보도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다(안진희, 2020).

예를 들어, 장덕희 외(2018)는 로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통해서 북한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북한 수산정책의 목적이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기술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진희권·윤인주(2019)와 황주희·윤인주(2022)는 로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수산정책을 분석하였다. 황주희·윤인주(2022)는 북한 수산업을 구성하는 핵심 원동력인 수산사업소 관련 정책들이 포함된 기사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 수산업의 추진전략과 정책비전을 추정하였다. 또한 채수란(2022)은 로동신문의 축산업, 수산업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통치 시기에 드러난 동물성 단백질 생산정책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기존 문헌들에서 채택한 연구 방식을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북한신문 기사들의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북한의 고래자원 이용논의들이 시기별, 사안별로 드러내는 특징과 변화 양상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신문기사에만 의존한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산

업·포경업 관련 북한 출판물을 함께 검토하여 보도된 신문자료들을 당시 북한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적 구조 속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다.³⁾

북한신문 기사의 검색과 추출을 위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관련 자료들의 선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검색을 위한 “고래”, “포경”, “곰등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연관된 기사 제목들을 1차로 선별하였다. 2차 선별 작업을 위해 북한자료센터를 3차례(2023년 4월, 5월, 7월) 방문하여 1차 선별된 기사 제목들의 해당 원문 내용들을 직접 대조·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차 선별에서 검색되지 않았던 관련 기사들을 포함하고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기사들을 제외한 북한신문 기사들을 최종 선정하였다.⁴⁾

분석 대상에는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의 기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⁵⁾ 예외적으로 문학신문 기사 1개를 포함하였다.⁶⁾ 최종적으로 선정된 신문기사 138개는 시기별 보도 횟수로 구별되는데, 195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1973년)까지 고래자원 이용 관련 기사들이 53번 보도되었지만, 1973년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 키워드 관련 기사들은 지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2000년부터 다시 관련 기사들이 등장하여 현재(2023년 7월 기준)까지 보도된 횟수는 85번에 이른다.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다음 장에서는 북한신문에 보도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을 분석하였다.

3) 참고한 주요 출판물: 박근순. (1991). 조선수산사(2). 공업종합출판사 / 김동진, 박윤식, 함복용. (1991). 조선수산사3. 공업종합출판사 / 장국중. (2010). 조선수산사(개정판). 사회과학출판사 / 김일성 저작집 13 (1959.1-1959.12). (1981).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저작집 15 (1961.1-1961.12). (1981).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저작집 22 (1968.1-1968.9). (1983).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저작집 24 (1969.6-1969.12). (1983). 조선로동당출판사

4) 제외된 북한신문 기사들은 북한의 맥락과는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보도하거나, 수필형식으로 구성되어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과 관련된 사실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노동신문에 보도된 “남극해 포경대 출어 준비 활발 (1954)” 기사는 소련의 포경업을 소개하기에 제외하였고, 문학신문사에서 수필형식으로 게재한 “고래 잡이의 첫 개가 김현구(1957)”, “고래잡는 사람들 리수형(1959)” 기사들을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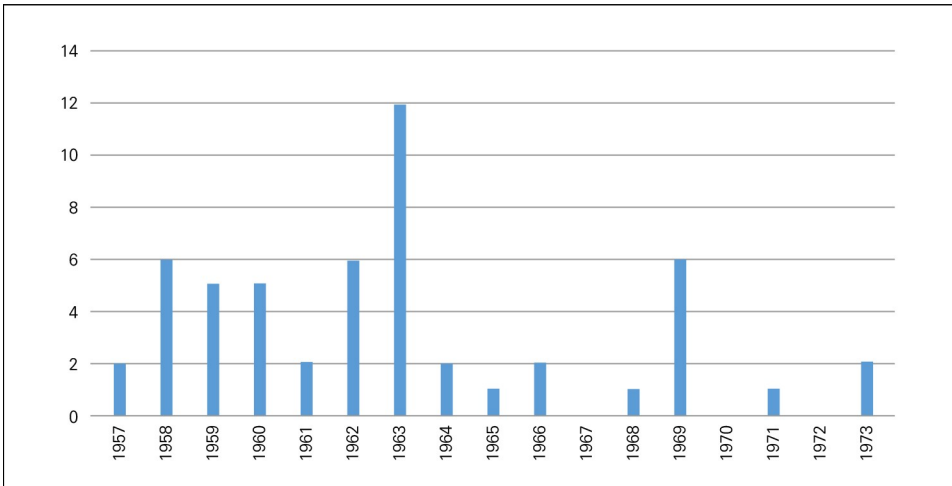
5) 기사들의 특징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제목만 약간 바꾸어 다른 일자에 보도하거나, 노동신문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 다른 날짜에 민주조선에 보도되는 등의 양상을 보여줌. 분석에 사용된 전체 기사목록은 첨부된 표-1, 2에서 확인할 수 있음

6) 장수고래를 잡았다-포경선을 타고-동승태, 1962.11.23., 문학신문

IV. 북한의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

1. 1950-1990년대의 북한의 고래자원 이용분석

■ 그림-1. 1957-1973 연도별 키워드 관련 기사 보도량 ■



자료: 논문 하단의 표-1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등장하는 기사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포경업이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 표-1 참조).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수산업 발전계획에서 강조된 기술 발전, 인프라 투자, 인력확충 등이 북한 포경업에 적용되었다. 본 장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분석 범주를 설정하여 이 당시의 기사 내용의 질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⁷⁾ 첫 번째 범주는 북한의 포경정책, 정치경제 관련 주제(예: 수산사업소, 인프라 투자, 인력확충, 현지지도, 식량확보 등)이며, 두 번째 범주는 포경업의 규모 및 조업형태, 포획된 고래자원 특징 관련 주제이다.

첫 번째 범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⁸⁾ 북한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57년에 포경업이 도입되어 동해안에 위치한 수산사업소들을 중심으로 포경선단이 활

7) 관련 기사들을 검토하여 반복·강조되는 부분들의 공통점을 확인하여 질적 분석을 위한 범주를 설정함

8) 각주로 인용된 기사의 출처를 로동신문은 로동, 민주조선은 민주로 표기하였음. 인용된 신문기사의 제목과 세부내용의 맞춤법 표기는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름

발히 운영되었다(박근순, 1991). 청진 앞바다의 풍부한 고래자원을 바탕으로 함경북도는 1950년대 후반 포경업을 수산업의 주요 발전과제로 설정하였다.⁹⁾ 1959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사에서 청진수산사업소가 등장한 횟수는 17번에 이른다. 1963년 노동신문 기사에서는 청진수산사업소 소속 포경선이 8개월 동안 1,500여 톤의 고래를 포획한 성과를 소개하기도 하였다.¹⁰⁾ 관련 기사에서 포경업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이 직접 챙기는 주요 산업으로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1959년과 1961년에 포경선단이 운영되었던 청진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여 포경업의 발전을 위한 더 많은 포경선과 성능이 향상된 고래포의 도입을 지시하였다(박근순, 1991; 김동진 외, 1991).¹¹⁾

1960년대 초반에는 포경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력보강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되었다. 수확량 증대를 위한 고래포 사격연습이 이루어졌고, 고래포 명중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자재도 도입되었다.¹²⁾ 북한의 포경업 도입 초창기 때부터 곱등어(돌고래) 잡이가 중요시되었는데, 이동하는 곱등어 떼를 포착하기 위해 항공기까지 동원되기도 하였다.¹³⁾ 이러한 고래, 곱등어잡이에 대한 투자와 포획능력의 향상은 1950-1960년대의 북한 수산업 진흥정책의 맥락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간 계획목표치 이상 포획하여 초과 달성하는 것이 주된 성과로 강조되었다. 이 시기 포획된 고래들은 고래고기, 고래기름 등의 용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생산물들의 원료로도 이용되었다.¹⁴⁾ 수산사업소에는 고래 부산물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관련 설비들이 구축되었다.¹⁵⁾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포경업이 1970년대 초 내부적으로 공급부족을 겪는 기름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¹⁶⁾

9) 청진 앞바다에서의 고래잡이, 1958.06.29., 로동

10) 291호 포경선의 영웅들-최길몽, 1963.11.20., 로동

11) 조국의 바다는 혈기 왕성한 청년들의 활무대, 1959.08.26., 민주 / 금년에 500톤의 고래를 잡겠다, 1963.03.03., 로동

12) 최근 1개월 간에 20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1961.06.10., 로동 / 연간 계획보다 30여톤 더 많은 고래를 잡았다, 1963.08.25., 로동

13) “지금 동해에서의 곱등어잡이는 비행기에 의하여 지휘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에도 그들은 항공 지휘기로부터 곱등어떼 발견의 무선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지정된 해구로 진출하였다.”(곱등어 잡이, 1962.05.05., 로동)

14) “양륙된 고래들은 선어 또는 가공품으로 처리되어 각지에 속속 공급되고 있다”(청진 수산 사업소에서 1개월간에 3마리의 고래를 포획, 1957.09.05., 로동), “그들이 잡은 4마리의 고래에서는 기름만도 7.5톤 이상이 나왔다”(3일 동안에 4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1960.06.11., 로동), “고래고기 1천여 톤이면 큰 황소 3천 336마리에 해당하는 양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막대한 육류와 함께 135 톤의 귀중한 고래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두 배에서 1천여 톤의 고래를 잡았다, 1963.12.01., 로동)

15) “그들이 잡은 4마리의 고래는 지금 이 수산 사업소 가공 직장에서 가공 처리되고 있는데 기름만도 약 6톤을 짜게 될 것이다”(2일 동안에 4 마리의 고래를 또 잡았다, 1960.07.07., 민주), “잡아 낸 고래들은 지체 없이 가공 처리되고 있다”(최근 1개월 간에 20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1961.06.10., 로동)

포경업의 발전을 둘러싼 정책적 논의들은 북한의 관련 출판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일성 저작집에 등장하는 포경업 관련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속도가 빠른 포경선을 가지고 고래를 비롯한 해수류를 잡는 사업도 대대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김일성 저작집 15 (1961.1-1961.12), 1981, p.393). “이번에 먼바다에 나가 50톤이나 되는 큰고래를 씹잡았는데 배에 큰 기중기가 없어서 그것을 끌어올리지 못하여 몇토막으로 잘라서야 겨우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선소들에서는 아무리 큰고래라도 끌어올릴수 있는 배를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 저작집 24 (1969.6-1969.12), 1983, p.66).

두 번째 범주인 포경업의 규모 및 조업 형태, 포획된 고래자원의 특징 관련 분석은 다음과 같다. 1950-1970년대 북한의 포경업은 동해, 서해에서 모두 이루어졌지만, 동해 어장에서 그 성과가 탁월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주된 조업구역은 위로는 함경북도, 아래로는 강원도 어장까지 아우르며, 북한 동해 수역 대부분 어장에서 고래잡이가 활발히 이루어졌다.¹⁸⁾ 동해어장 중에서도 함경북도의 청진수산사업소, 함경남도의 신포수산사업소, 강원도의 원산수산사업소 소속 포경선단들의 활약에 대한 보도가 관련 지면의 대부분에 할애되었다.¹⁹⁾ 이 당시 북한의 포경업은 연근해에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연근해뿐만 아니라 원해 어장에서의 조업을 여러 번 강조한 것으로 보아, 공해상에서의 고래 잡이도 여러 번 시도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1963년도 로동신문 기사에서는 “대담하게 원해에 진출하여 포경전을 전개함으로써 새 어장을 개척한 후 무려 21마리의 고래를 잡아내는 혁신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⁰⁾ 민주조선 1971년과 1973년

16) “고래, 곰등어 같은 큰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우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 기름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2백여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1973.09.17., 로동)

17) 고래잡이에서 올린 개가, 1963.11.10., 로동

18)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고래가 잡힌다-청진 수산 사업소 포경선 제1호의 성과, 1957.08.11., 로동), 함경북도 어랑군 어대진 앞바다(금년 처음으로 중량 11톤의 고래를 잡았다, 1959.03.05., 로동 / 3일 동안에 4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1960.06.11., 로동),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청진 앞바다에서의 고래잡이, 1958.06.29., 로동 / 이들 동안에 고래 네 마리를 잡았다, 1960.07.06., 로동), 함경남도 신포시 앞바다(곰등어 1750마리 신포 수산 사업소 203호 곰등어 건착선에서, 1961.07.22., 로동), 강원도 통천군 고저 앞바다(멸치 대어군 출현 3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1962.04.17., 로동), 강원도 남안(49톤짜리 고래를 잡았다, 1963.09.18., 로동)

19) “고래 성어를 맞이한 청진 수산 사업소 로동자들은... 1마리가 평균 10톤 되는 4마리의 고래를 잡는 성과를 올렸다”(3일 동안에 4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1960.06.11., 로동), “원산 수산 사업소에서는 고래잡이 연간 계획을 455%로 넘쳐 수행하였으며”(동해의 고래잡이 영웅들-전기철, 1963.12.18., 로동), “신포 수산사업소에서는 7월 4일까지에 연간 곰등어잡이 계획을 초과 완수하였다”(연간 곰등어잡이 계획 완수, 1958.07.08., 로동), “1963년 원산수산사업소 소속 포경선이 강원도 남안해역에 진출하여 49톤의 고래를 포획하였으며”(49톤짜리 고래를 잡았다, 1963.09.18., 로동)

기사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먼바다에 나가는 배들에 고래를 쏘는 포만 달아주면 고래를 고기잡이 나가면서 잡고 들어오면서도 잡고 자망을 하다가도 맞다면 잡을수 있을 것입니다...앞으로는 먼바다에 나가서 고래를 잡아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²¹⁾ “수산부문지도일군들이 조직만 잘하면 먼바다에 나가서 고래도 많이 잡을수 있습니다.”²²⁾ 1970년대 초의 기사들은 김일성의 교시를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원양포경업의 도입을 통해 조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신문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래 포획을 통해 식량, 물자, 원료 등의 조달을 증대하고자 한 북한 정권의 의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관련 기사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북한 포경업의 또 다른 특징은 포경선 자체가 고래잡이 이외의 어업활동에 동원되거나 일반어선을 개조하여 포경업에 종사하게 한다는 점이다. 1959-1963년 사이의 노동신문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새 배는 낙지²³⁾잡이를 하는(고래를 쫓을 수 없는 밤이면 포경선들은 낙지잡이를 한다) 2호선 옆을 지난다.”²⁴⁾ “이곳 수산 사업소 노동자들은 이미 5척의 전문 포경선 외에 3척의 저애망 선들까지 고래포를 설치하고 다른 고기를 잡으면서 고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였다.”²⁵⁾ “이 기간에 그들은 또한 곱등어, 물개, 낙지, 명태 등 다종 다양한 물고기를 수백 톤이나 잡아 냈다.”²⁶⁾ 1950년대 후반 이래 신문 기사들에서는 전문포경선과 일반어선들이 포경 조업을 포함한 여러 어로행위에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도해 왔기 때문에 이는 북한 포경업의 관행화된 운영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50-1970년대 북한 포경업은 대형고래류, 곱등어 등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포획 목표치보다 더 많은 포획 성과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1958년 보도에서는 고래 포획 과업이 160% 이상 초과 달성된 것을 홍보하고 있다.²⁷⁾ 원산수산사업소의 경우 1962년에 기존의 연간 고래잡이계획을 165% 초과 달성하였고,

20) 291호 포경선의 영웅들, 1963.11.20., 노동

21) 석달 남짓한 동안에 한배에서 74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1971.11.24., 민주

22) 고래를 많이 잡았다, 1973.09.28., 민주

23) 같은 대상에 대해 남북한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로 표기하며, 낙지의 경우는 ‘서해낙지’로 표기한다(강보선·양수경, 2018, p.3).

24) 포경 제6호선-민청호, 1959.09.07., 노동

25) 3일 동안에 4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1960.06.11., 노동

26) 포경선들의 긴밀한 협동 작전 밑에, 1963.11.20., 노동

27) 35일간 14마리의 고래를 포획, 1958.06.04., 노동

1963년에는 기존 연간 고래잡이계획 목표치를 455% 초과 달성하였고 기름고래(대왕병 코돌고래의 북한어), 멸치고래(브라이드고래), 장수고래(긴수염고래) 등의 고래를 포획하였다.²⁸⁾ 또한 청진수산사업소의 경우 1962년에는 530여 톤의 고래고기를 생산하였으며, 1963년에 기존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1천 100여 톤의 고래고기 생산을 계획 목표로 책정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²⁹⁾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청진수산사업소에서 포경선 286호가 장수고래(긴수염고래)와 밍크고래 등 72톤의 조업성과를 냈음을 보도하였다.³⁰⁾ 197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포획 실적이 유지되었는데, 청진수산사업소 소속 포경선들은 1971년, 1973년에 각각 85마리의 곱등어(돌고래), 80여 톤의 큰 고래와 200여 마리의 고래를 포획하였다.³¹⁾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관련 북한 출판물에서도 1950년대-1970년대 초반까지의 북한의 고래자원 이용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김동진 외(1991)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대에 이미 포경선대, 선단의 협동작전으로 많은 고래 포획이 가능했으며,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매년 고래, 곱등어 생산량을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1970년에는 개척한 원양고래어장에서 74마리의 고래를 포획했음을 기록하고 있다(김동진 외, 1991).

전술한 1950-1970년대 초반의 북한 포경업의 발전상에도 불구하고 1974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키워드(고래, 포경, 곱등어) 관련 기사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신문들이 혁신적 어로방식, 어획량 증대, 수산 모범 노동자 선전 등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수산업 진흥을 강조하는 출판매체임을 고려할 때(황주희, 윤인주, 2022), 1970년대 중반부터 포경 관련 기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포경업이 북한체제의 홍보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조업 현실(예: 가용할 수 있는 고래자원의 감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조수룡, 2020). 북한 수산업 역사서인 “조선수산사 3”에서도 1970년대 초반 이후 6개년계획시기(1971-1976)와 제2차 7개년계획시기(1978-1984)의 포경업의 발전상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김동진 외, 1991).

28) 68톤의 고래를 잡았다, 1962.11.23., 로동 / 동해의 고래잡이 영웅들-전기철, 1963.12.18., 로동

29) 연간 계획보다 30여톤 더 많은 고래를 잡았다, 1963.08.25., 로동

30) 72톤짜리의 고래를 잡았다-주수일, 1963.04.26., 로동

31) 석달 남짓한 동안에 한배에서 74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1971.11.24., 민주 / 2백여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1973.09.17., 로동 / 고래를 많이 잡았다, 1973.09.28., 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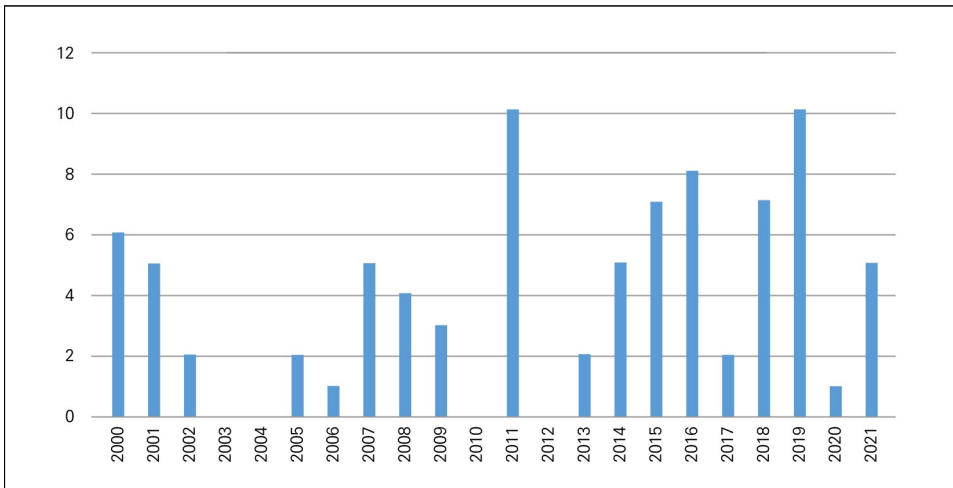
1979년 발간된 미국 상원의 상업, 과학, 교통 위원회의 불법포경에 관한 보고서는 1970년대 후반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수입한 통계자료를 공개하였다(United States Senate, 1979). 이 보고서는 일본이 IWC 비회원국인 북한으로부터 34톤(1977년), 8톤(1978년)의 고래고기를 수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United States, 1979).³²⁾ 이러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볼 때 1970년대에 북한 내부의 포경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포경업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어느 정도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7년에 개최된 IWC 연례총회에서 IWC 가맹국과 비가맹국 사이의 고래고기 수출입 금지 조치 시행을 결의하였는데(박구병, 1995b), 이는 IWC 비가맹국인 북한이 일본과 같은 IWC 가맹국에 더 이상 고래고기를 수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포경업을 포함한 수산업이 북한의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의 중요한 원천이었음을 고려할 때, IWC의 이러한 강경 조치는 북한 내에서의 기존 고래자원의 위상축소를 초래하여 북한 포경업이 몰락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³³⁾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들의 변화를 고려할 때 1950-1990년대의 북한의 고래자원 이용 양상은 시기별로 도입기(1950년대), 성장 및 전성기(1960-1970년대 초반), 침체 및 쇠퇴기(1970년대 중반-1990년대)의 대략적인 추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32) 물론 이러한 고래고기 무역 규모(34톤, 8톤)는 북한의 1960년대 포경업의 어획고를 고려할 때 많지 않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다.

33) 북한의 수산업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원으로서의 목적도 중시되었다(박성쾌·심기섭, 1998). 북한은 수산업 발전을 통한 더 많은 외화획득을 위해 수산업의 근대화, 과학화, 어족자원 증산에 정책의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김종화, 2019; 구민교, 2019; 채수란, 2022).

2. 2000년 이후의 고래를 둘러싼 북한의 태도 변화

■ 그림-2. 2000-2021 연도별 키워드 관련 기사 보도량 ■



자료: 논문 하단의 표-2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자취를 감추었던 키워드(고래, 포경, 곶등어) 관련 기사들은 2000년부터 다시 등장한다(그림-2, 표-2 참조). 내용분석을 위해 2023년 8월 검색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출된 총 85개의 북한신문(로동신문, 민주조선) 기사들을 활용하였다. 기존 1950-1970년대의 기사들과는 달리 2000년 이후 보도들은 북한의 포경업에 관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대신 두드러지는 두 가지 범주는 첫째, 일본의 포경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둘째, 고래 보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다.³⁴⁾ 첫 번째 범주에는 일본의 상업포경 지속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갈등, 그리고 북한의 고래자원 감소에 대한 일본의 영향에 대한 논의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해양 공유재 측면에서 고래자원 관리·보존, 해양환경과 관련된 주제들을 포함한다.

먼저 첫 번째 범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2000년 이후의 관련 기사들은 전반적으로 일본의 지속적인 포경조업을 비판하며, 북한 해역의 감소한 고래자원이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한 약탈적 식민지포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34) 연구자가 분석을 위해 두 가지 범주로 설정하였지만, 개별 신문기사에는 두 가지 범주의 주제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예를 들어 2014년 민주조선은 “일제가 패망되기 전까지 수십만마리에 달하는 고래가 도살되었으며 결과 우리 나라 바다에서는 고래종자가 절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그 액수는 당시의 시가로 수십억원에 달하였다”고 보도하였다.³⁵⁾

이 시기 기사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과거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당국에 의해 야심 차게 전개되었던 포경조업의 역사적 궤적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공식 포경기록은 1957년 8월 청진수산업소에서 행해진 고래잡이 기사에서 시작했으며,³⁶⁾ 당시 국가주도의 포경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더 나아가 관련 기사들에서 언급된 포수들의 이력, 나이를 바탕으로 시기를 역산해 보면 과거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던 식민포경의 유산(포경 기술, 지식, 인력 등)으로부터 북한 포경업이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이렇듯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과거 북한의 포경기록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의 기사들은 북한수역의 고래자원 감소가 일본의 계속된 상업포경으로 인한 결과임을 일변도로 주장하며, 일본이 국제사회의 고래 보존 논의(인류 모두의 자원인 고래)에 동참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³⁸⁾

또한 고래잡이를 둘러싸고 일본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는 다른 국가들(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기사들을 보도하면서, 북한신문들은 포경업과 무관한 외부자의 시점에서 고래문제를 다루고 있다.³⁹⁾ 예를 들어, 2010년 호주 정부는 일본의 국제포경조약 위반 사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일본의 포경행위 비난 보도가 2011년 10개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그림-2 참조).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남극해 포경조업금지를 최종 판결하였는데, 북한신문들은 이때를 전후한 시기에 관련 내용들을 지속해서 보도하면서 일본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그림-2 참조).⁴⁰⁾ 일본이

35) “일본이 조선에서 고래자원을 말린 저들의 역사적 중대범죄... 지금 고래가 얼마없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고래자원박탈정책의 후과” (조선의 고래자원을 말린 일본의 과거 범죄, 2014.03.15., 민주)

36) 청진 수산 사업소에서 1개월간에 3마리의 고래를 포획, 1957.09.05., 로동

37) “...20여 년 간의 고래잡이의 경험을 가진 손이든, 민형식 포수들의 정확한 명중과...” (청진 수산 사업소에서 1개월간에 3마리의 고래를 포획, 1957.09.05., 로동), “...그도 그럴 것이 13세 때부터 40 여 년 간 바다에서 고래잡이로 늙어 온 그였건만 반 년 남짓한 기간에 1천 5백 여 톤의 고래를 잡아보기란 금년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명포수, 1963.11.20., 로동)

38) 고래까지 울리는 일본의 리속차리기, 2001.05.21., 로동 / 배경받고있는 일본의 고래잡이계획, 2002.05.28., 민주 / 고래자원을 말리우려는 범죄행위, 2005.06.19., 로동

39) 고래잡이문제와 관련한 미일사이의 충돌 격화, 2000.09.23., 민주 / 고래잡이문제를 둘러싼 미일의 대립, 2000.09.25., 로동

IWC를 탈퇴하고 공식적으로 자국 영해 내에서의 포경 재개를 선언한 2019년에는 키워드 관련 보도 횟수가 다시 최고치(10개)에 도달하였다(그림-2 참조).⁴¹⁾ 종합하면, 당시 관련 기사들은 국제사회의 기조와 다른 포경업 유지라는 독자노선을 채택한 일본에 대한 북한의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의 기사에서 두드러지는 두 번째 범주는 고래자원을 해양 공유재로 인식하여 고래의 관리·보존을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신문들은 세계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존 논의에 간접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며 반포경 국가들(호주, 뉴질랜드 등) 비슷한 논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일본의 포경업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래의 보존을 강조하는 북한신문 기사들은 북한의 역사적 포경궤적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러한 일관된 보도 방식을 통해 북한은 스스로를 지리적·역사적으로 포경업과 무관한 국가로 분리함과 동시에 북한수역의 고래자원 감소의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며 이를 통해 해양 공유재인 고래의 이용에 있어서 북한이 피해당사자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키워드 관련 기사 보도에서는 국제적 해양오염으로 인해 고래들이 겪고 있는 생태적 측면들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죽은 고래의 배를 갈랐더니 위장 안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내용이라든지, 지구의 심각한 환경오염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고래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⁴²⁾ 생태적 측면이 강조된 이러한 기사 내용들은 북한 내부적으로 고래 보존의 필요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일본의 포경행위를 비판할 수 있는 논리 정당화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⁴³⁾ 이러한 주장들은 정치·경제·사회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적인 틀 짓기로 바라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맞추어 대응하는 북

40)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의 불법적인 고래잡이를 중지시키기로 판결, 2014.04.05., 민주 /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일본, 2014.04.29., 민주 / 뉴질랜드와 오스트랄리아 고래잡이 중지를 요구, 2014.06.21., 민주

41) 일본 고래잡이에 광분, 2019.07.03., 로동 / 국제사회의 강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일본의 고래잡이, 2019.07.13., 민주 / 본색을 드러낸 파렴치한 고래사냥군, 2019.07.15., 로동

42) 심각한 바다오염, 2021.07.14., 로동 / 오염되는 생태환경, 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2021.09.21., 로동 / 바다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수지오물, 2021.11.29., 로동

43) "...그 누구에게도 인류 공동의 재부를 제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처리할 권리가 없다. 일본은 이번에 대대적인 고래잡이에 나섬으로써 저들이 인류공동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도전해나섰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 (제 리속만을 노린 일본의 고래잡이, 2000.08.18., 민주)

한당국의 정치적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임채환 외, 2021).

북한신문 기사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2000년 이후 고래를 둘러싼 북한의 태도가 이전 시기의 포경업 확대 기조에서 국제사회의 포경 반대 기조로 선회한 것을 감지할 수 있다. 1950-1970년대의 키워드 관련 기사들이 고래자원 이용(포경)을 장려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내용들로 채워진 데 반해, 2000년 이후의 기사들에서 언급되는 고래자원은 일본의 고래잡이 강행 비판, 북한수역 고래자원 보호 강조, 국제사회의 포경 반대 주장을 지지하는 정치적·상징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에 대한 북한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은 자원의 의미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결과가 아닌 정치·경제적, 문화·상징적 요인들과 결부되어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재확인시켜 준다(Bridge, 2011; Marston, 2019).

V. 토론 및 결론

본 장에서는 앞선 북한의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분석을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들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째, 수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의 시기별 고래자원 이용의 특성과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전술한 기사, 문헌들을 토대로 볼 때, 1950-1970년대 북한의 포경업은 대형고래류뿐만 아니라 돌고래 등 크기에 상관없이 수산업의 연간 계획을 초과달성하는 데 고무되어 있었으나, 이는 한정된 고래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남획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체제 소련의 1950-1960년대의 포경업을 분석한 York(2017)는 계획경제 하에서 국가가 연간 생산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포경 선원, 선단 간의 경쟁을 촉발시켜 고래남획을 가속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매년 책정된 생산 목표치가 달성되면 다음 해에는 상향된 목표치로 재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고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관리에 대한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York, 2017). 북한신문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생산 목표 설정”, “목표치 초과 달성”과 같은 문구들은 당시

사회주의 계획경제 노선을 추구하던 소련의 포경업과 유사한 행태를 보여준다.⁴⁴⁾

1980년대 북한 포경업은 북한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한정된 고래자원을 과도하게 포획하고, 매년 그 수준 이상의 포획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발전된 기술과 기반 시설, 그리고 많은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York, 2017; Heé, 2019). 그러나 1980년대 북한이 직면한 경제의 침체국면 속에서 수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난 기반 시설, 전기, 연료 등의 공급부족 문제들은 어선 가동률의 하락, 어민들의 수산사업소 이탈과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진희권·윤인주, 2019).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북한은 그동안 추진하던 원양어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대신 육지와 가까운 연안 중심의 무동력 어선을 통한 소규모 어업과 양식어업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박성쾌·심기섭, 1998).

대외적인 맥락에서 북한 포경업의 쇠퇴를 이해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필두로 한 국제적 고래자원 보호 대책의 시행이 북한의 포경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77년 IWC 연례총회에서는 IWC 가맹국과 비가맹국 사이의 고래고기 수출입 금지 조치를 결의하여 기존 비가맹국들을 국제적 고래 보존 논의의 장으로 이끌었으며, 1986년부터 상업포경의 금지(moratorium)를 시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박구병, 1995b; 김두겸·편상훈, 2012). 1970-1980년대의 이러한 고래 보존 논의의 확산을 감안할 때 북한이 기사 보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국의 포경업을 드러내는 것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000년대의 북한 수산업은 1980-1990년대에 비해 더욱 열악한 조업 상황을 드러냈다. 식량 공급을 위한 이전 시기의 과도한 남획은 어족자원의 고갈을 불러왔고, 조업을 위한 연료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어선의 출어율이 30% 미만에 그쳤다(남성욱, 2006). 또한 유통·가공·저장시설이 부족하여 생산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김현용·박광범, 2006). 뿐만 아니라, 북한 어민들에 의한 조업이 효과적인 조업량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자 북한당국은 중국 어선들에게 입어권을 매각하였고, 이는 북한수역 어족자원의 고갈을 앞당기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김하영, 2013). 이 같은 1980-2000년대의 북한 수산업 전반의 쇠퇴 속에서 다른 어업에 비해 전문적인 기술, 인

44) 연간 곱등어잡이 계획 완수, 1958.07.08., 로동 / 수산성에서 고래와 곱등어 연간 어로계획을 완수, 1958.07.16., 로동 / 9천 톤의 물고기와 80여 마리의 고래를 더 잡을 것을 결의, 1960.05.15., 민주

프라, 노동력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는 포경업은 더 이상 북한 정권에게 매력적인 산업(식량자원 확보, 외화벌이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워졌다(Heé, 2020). 고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포경)과 보존 두 가지를 주장해 왔던 IWC의 기존 정책 방향이 보존으로 기울게 된 2000년대 이후의 상황 또한 포경업 유지, 재기에 대한 북한당국의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연도별 고래포획이나 수산업 전반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신문기사 내용분석을 검토할 수 없었던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고래자원 이용논의에 북한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해양 공유재의 관리와 보존의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1946년 민간사업자 주도로 시작된 남한의 포경업에 비해(박구병, 1995b), 북한의 포경업은 그 시기가 다소 늦은 1957년에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정부 주도하에 계획 및 운영되었다(박근순, 1991). 북한 포경업 관련 정책의 초점은 고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매년 설정된 계획 포획량을 초과 달성하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⁴⁵⁾ 일제강점기 포경을 거치며 이미 남획된 한반도 주변의 고래자원은 북한 포경선단의 과도한 조업으로 인해 더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광범위한 해양 영역을 회유하는 대형고래류의 포획 성과를 자주 보도한 북한 포경업 기사를 감안할 때, 이러한 북한 포경업의 운영형태가 대한민국의 포경업의 시기별 조업실적의 변화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기존 한국의 고래자원 이용논의를 보다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진입점을 제공한다.

해양 공유재는 접근과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과도한 착취로 인한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Berkes, 2005). 특히 광범위한 지리적 스케일을 회유하는 어족자원의 경우는 그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국가 단위를 넘어선 국제적 스케일에서의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Berkes, 2006; Campbell, 2007). 본 연구의 분석이 해양 공유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래자원 이용의 역사적 궤적에 대한 탐구는 해양 공유재의 감소에 기여한 동인(driver)들이 누구였는지에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45) 한국은 해방 이후 초창기 포경 당시에 곱등어(돌고래)를 포경의 주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만,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곱등어잡이에 열을 올렸다(박근순, 1991).

환경을 둘러싼 해결되지 않는 현재의 갈등 상황들은 많은 경우 과거의 누적된 역사적 사건들에 기인한다. 따라서 역사적 검토는 고래자원을 둘러싼 현재의 정치에서 동원되는 특정 시간적·공간적 전략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Bridge, 2014; Himley, 2014). 또한 이를 통해 기존 포경, 고래 보존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북한이라는 중요한 행위자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고래자원을 둘러싼 남북 양자 간 협력 및 다자간 협력의 새로운 진입점을 제공한다. 북한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대되었으며, 최근(2016-2018) 환경협력과 관련된 주요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최현아 외, 2019). 이는 2000년 이후의 북한신문 기사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래 보존 의제를 통해 남북한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북한은 IWC의 비회원국으로서 고래자원, 포경과 관련된 자료나 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남북 당국 간에 고래를 의제로 한 회담이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국민신문고 해양수산부 답변자료, 2023). 그러나 고래를 점점으로 한 협력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2005년 울산에서 개최된 IWC의 연례총회에서는 한반도 주변 수역을 회유하는 밍크고래 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평가를 위해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의 공동 조사에 북한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한겨레, 2005). 또한, 2010년대 IWC 과학위원회에서는 밍크고래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해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국민신문고 해양수산부 답변자료, 2023). 한국 정부에서도 “한반도 주변 해역의 고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북한 해역에서의 고래 분포 현황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즉시 북한에 고래에 대한 현황 자료와 조사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국민신문고 해양수산부 답변자료, 2023).

고래를 점점으로 한 이러한 협력 시도의 사례들은 북한과의 고래자원 협력이 단순히 남북 양자 간 협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접 국가들을 포함하는 다자 협력 채널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외교·군사적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이른 시기에 관련 계획이 수립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차후 해양 공유재 관리라는 넓은 범주 안에서 고래를 점점으로 한 교류 협력이 실천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동아시아의 고래 보존 거버넌스

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57년부터 2021년까지의 북한신문 기사 내용분석을 통해 시기별 북한의 고래자원 이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키워드(고래, 포경, 곱등어)를 통해 선별된 기사 보도에서 북한당국은 1950-1970년대 초반까지 포경업을 수산업의 주요한 부문으로 인식하고 수산사업소를 중심으로 한 포경 조업을 시행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키워드 관련 기사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들을 이전 시기 북한의 고래자원 포획, 북한 수산업의 전반적인 침체, 국제적 고래 보존 논의 확산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0년 이후 다시 등장한 키워드 관련 기사들은 이전 시기 북한의 포경역사를 언급하지 않으며, 일본의 지속적인 포경에 대한 비판, 국제적 해양 공유재인 고래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래자원 이용에서 시기별로 달라지는 북한의 입장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며, 기존 동아시아 고래자원의 관리·보존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북한이라는 중요한 행위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향후 고래를 점점으로 한 남북 양자 간 그리고 다자간 교류협력의 장에 북한을 참여시킬 때 관련 대응 논리, 의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 표-1. 1957~1973년 북한신문 키워드 관련 기사 목록⁴⁶⁾ ■

	기사 제목	출처	발행일자
1	청진 수산 사업소에서 1개월간에 3마리의 고래를 포획	로동	1957.09.05
2	고래가 잡힌다 청진 수산 사업소 포경선 제 1호의 성과	로동	1957.08.11
3	길 9.3 메터, 체중 7.5톤의 고래를 포획	로동	1958.05.04
4	중량 7톤 이상의 고래 두 마리를 또 포획	로동	1958.05.07
5	35일간에 14마리의 고래를 포획	로동	1958.06.04
6	청진 앞바다에서의 고래잡이	로동	1958.06.29
7	년간 곱등어잡이 계획 완수	로동	1958.07.08
8	수산성에서 고래와 곱등어 연간 어로계획을 완수	로동	1958.07.16
9	급년 처음으로 중량 11톤의 고래를 잡았다 청진 수산 사업소에서	로동	1959.03.05
10	12톤에 달하는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59.06.10
11	길이 7메터, 중량 8톤짜리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59.07.31
12	조국의 바다는 혈기 왕성한 청년들의 활무대 수상 동지의 현지 교시를 받들고	민주	1959.08.26

46) 주: 표-1, 2의 기사 제목 출처에서 '로동'은 로동신문, '민주'는 민주조선을 가리킴(자료: 저자정리)

	기사 제목	출처	발행일자
	고래잡이에 동원된 청년들		
13	포경 제6호선-민청호	로동	1959.09.07
14	9천 톤의 물고기와 80여 마리의 고래를 더 잡을 것을 결의	민주	1960.05.15
15	3일 동안에 4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60.06.11
16	425마리의 곱등어를 신포 수산 사업소 302호 건착선의 한 달 동안 어로 성과	로동	1960.06.15
17	이틀 동안에 고래 네 마리를 잡았다	로동	1960.07.06
18	2일 동안에 4마리의 고래를 또 잡았다	민주	1960.07.07
19	최근 1개월간에 20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청진 수산 사업소에서	로동	1961.06.10
20	곱등어 1750마리 신포 수산 사업소 203호 곱등어 건착선에서-최형중	로동	1961.07.22
21	벌치 대어군 출현 3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62.04.17
22	곱등어 잡이	로동	1962.05.05
23	464마리의 곱등어를 잡았다	로동	1962.06.03
24	고래잡이	로동	1962.10.04
25	68톤의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62.11.23
26	장수 고래를 잡았다 -포경선을 타고- 동승태	문학	1962.11.23
27	금년에 500톤의 고래를 잡겠다	로동	1963.03.03
28	72톤짜리의 고래를 잡았다-주수일	로동	1963.04.26
29	닷새 동안에 10여 마리의 고래를 잡았다-주수일 심승만	로동	1963.05.30
30	년간 계획보다 30여톤 더 많은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63.08.25
31	49톤짜리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63.09.18
32	고래잡이에서 올린 개가	로동	1963.11.10
33	291호 포경선의 영웅들-최길몽	로동	1963.11.20
34	명포수-정도경	로동	1963.11.20
35	포경선들의 긴밀한 협동 작전 밑에-김태훈	로동	1963.11.20
36	고래잡이 선원들의 새 결의	로동	1963.11.22
37	두 배에서 1천여 톤의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63.12.01
38	동해의 고래잡이 영웅들-전기철	로동	1963.12.18
39	더 많은 고래를 잡는다 적극적인 어로전으로-련창성	로동	1964.09.06
40	동해안 각 수산 사업소들에서 년간 고래잡이 계획을 실행	로동	1964.12.26
41	황소 500마리분의 많은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65.05.14
42	45톤짜리 고래를 잡았다-전태석	로동	1966.04.18
43	두 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66.06.05
44	곱등어, 송어를 많이 잡는다 리재준동무가 사업하는 수산사업소에서	민주	1968.06.14
45	40여일동안에 49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69.09.03
46	최근 수일간에 18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69.06.17
47	최근 한달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 실적의 5.3배에 달하는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69.08.13
48	최근 한달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 실적의 5.3배에 달하는 고래를 잡았다	민주	1969.08.16

	기사 제목	출처	발행일자
49	40여일동안에 49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민주	1969.08.31
50	40여일동안에 49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69.09.03
51	석달 남짓한 동안에 한배에서 74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민주	1971.11.24
52	2백여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로동	1973.09.17
53	고래를 많이 잡았다	민주	1973.09.28

■ 표-2. 2000-2021년 북한신문 키워드 관련 기사 목록 ■

	기사 제목	출처	발행일자
1	제 리속만을 노린 일본의 고래잡이	민주	2000.08.18
2	국제동물보호단체 대표들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항의	민주	2000.08.30
3	고래잡이문제와 관련한 미일사이의 충돌격화	민주	2000.09.23
4	고래잡이문제를 둘러싼 미일의 대립	로동	2000.09.25
5	고래잡이문제를 둘러싼 미일마찰	민주	2000.11.21
6	아르헨티나 고래를 보호	민주	2000.11.29
7	<그린피스>활동가들 일본의 고래잡이를 반대	민주	2001.03.27
8	고래까지 올리는 일본의 리속차리기	로동	2001.05.21
9	국제포경위원회 고래잡이를 중지할 것을 일본에 요구	민주	2001.08.02
10	고래자원을 말리는 일본의 <고래사냥군>들	민주	2001.11.17
11	<그린피스>일본의 고래잡이에 대항	민주	2001.12.19
12	국제동물보호단체 일본의 고래잡이확대계획에 항의	민주	2002.05.25
13	배격받고있는 일본의 고래잡이계획	민주	2002.05.28
14	고래자원을 말리우려는 범죄행위	로동	2005.06.19
15	<그린피스>일본의 고래잡이확대계획에 항의	민주	2005.11.22
16	알미운 고래사냥군	로동	2006.07.16
17	세계적으로 심각한 고래와 곱등어사멸위기	민주	2007.06.02
18	일본의 고래잡이에 항의	민주	2007.05.30
19	미국과학자들 일본의 고래잡이를 비난	민주	2007.12.05
20	일본의 고래잡이를 규탄배격	민주	2007.12.06
21	<그린피스>일본의 고래잡이를 비난	민주	2007.12.25
22	일본의 부당한 고래잡이에 대한 오스트랄리아의 대응조치	민주	2008.01.17
23	국제환경보호단체 일본의 부당한 고래잡이를 비난	민주	2008.01.26
24	리기적목적을 위한 집요한 포경활동	로동	2008.04.12
25	비난받는 고래사냥국의 리기적속심	로동	2008.08.18
26	국제환경보호단체 성원들 일본의 고래잡이에 항의	민주	2009.02.20

	기사 제목	출처	발행일자
27	세계야생동물기금 일본의 고래잡이를 비난	민주	2009.06.27
28	오스트랄리아 일본의 부당한 고래잡이를 비난	민주	2009.11.27
29	라틴아메리카나라들 일본의 무차별적인 고래잡이를 단죄	민주	2011.02.22
30	일본의 무차별적인 고래잡이를 단죄	로동	2011.02.23
31	파렴치한 <고래사냥군>의 객적은 <울분>	로동	2011.02.28
32	일본의 고래잡이행위 비난	로동	2011.05.14
33	오스트랄리아 일본의 고래잡이 행위를 비난	민주	2011.05.17
34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	민주	2011.06.16
35	비법적인 고래잡이	로동	2011.06.16
36	고래사냥군의 줄행랑	로동	2011.08.05
37	일본의 고래잡이 행위를 규탄	민주	2011.10.10
38	일본의 고래잡이 비난	로동	2011.10.11
39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 규탄	민주	2013.02.12
40	비법적인 고래잡이 규탄	로동	2013.02.14
41	조선의 고래자원을 말린 일본의 과거범죄	민주	2014.03.15
42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의 불법적인 고래잡이를 중지시키기로 판결	민주	2014.04.05
43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의 불법적인 고래잡이를 중지시키기로 판결	로동	2014.04.06
44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일본	민주	2014.04.29
45	뉴질랜드와 오스트랄리아 고래잡이 중지를 요구	민주	2014.06.21
46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	로동	2015.06.21
47	[정세론해설] <고래사냥군>의 감출수 없는 흑심	로동	2015.11.02
48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계획을 비난	민주	2015.12.06
49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일본	민주	2015.12.08
50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계획을 비난	로동	2015.12.08
51	국제사회계 일본의 부당한 고래잡이행위 단죄 ⁴⁷⁾	민주	2015.12.11
52	일본의 부당한 고래잡이행위 단죄	로동	2015.12.25
53	국제적규탄을 받고있는 일본의 <조사포경> 놀음	로동	2016.01.06
54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일본	로동	2016.05.17
55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는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	로동	2016.08.03
56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매여달리는 일본	로동	2016.09.13
57	일본의 고래잡이 비난	로동	2016.11.08
58	[정세해설] 분노를 자아내는 비법적인 고래잡이	로동	2016.11.15
59	국제포경위원회 일본의 고래잡이를 비난	민주	2016.11.18
60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	로동	2016.11.25
61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를 비난	로동	2017.01.27
62	[정세해설] 고래잡이를 정당화하려는 책동	로동	2017.07.04

	기사 제목	출처	발행일자
63	130여마리의 고래가 무리로 죽는 현상 발생	민주	2018.04.08
64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	민주	2018.04.13
65	[정세해설] 고래를 멸종시키려는 행위	로동	2018.06.10
66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	민주	2018.06.29
67	[정세해설] <고래사냥국>의 리기적속심	로동	2018.07.09
68	일본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광분	민주	2018.11.14
69	일본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광분	로동	2018.11.15
70	만천하에 드러난 <고래사냥군>의 속심	로동	2019.01.06
71	국제적비난의 대상이 된 고래 사냥군	민주	2019.01.11
72	파렴치한 고래 사냥군의 본색	로동	2019.04.28
73	일본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광분	로동	2019.04.09
74	고래사냥에 열을 올리는 일본	민주	2019.06.15
75	일본 고래잡이에 광분	로동	2019.07.03
76	일본 고래잡이에 광분	민주	2019.07.06
77	국제사회의 강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일본의 고래잡이	민주	2019.07.13
78	본색을 드러낸 파렴치한 고래사냥군	로동	2019.07.15
79	고래없이 열린 축전이 국제사회에 올린 경종	로동	2019.10.21
80	비법적인 고래잡이	로동	2020.12.29
81	비법적인 고래잡이	로동	2021.04.13
82	비법적인 고래잡이	로동	2021.06.21
83	심각한 바다오염	로동	2021.07.14
84	오염되는 생태환경, 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로동	2021.09.21
85	바다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수지오물	로동	2021.11.29

투고일 2023. 10. 27
 1차 심사일 2023. 11. 23
 게재확정일 2023. 12. 20

47) 기사 본문에는 “고래잡이행위”로 작성되어 있으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 검색 페이지에는 “고래잡위행위”로만 검색이 가능함

■ ■ 참고문헌

1. 강보선·양수경. 2018.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 국립국어원.
2. 구민교. 2019.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남북한 해양협력 방안: 수산업,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1(3), pp. 1-16.
3. 김동진·박윤식·함복용. 1991. 『조선수산사3』, 공업종합출판사.
4. 김두겸·편상훈. 2012. 「고래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pp. 229-257.
5. 김백영. 2013. 「한말~일제하 동해의 포경업과 한반도 포경기지 변천사」. 『도서문화』, 41, pp. 7-36.
6. 김일성 저작집 13 (1959.1-1959.12). 1981. 조선로동당출판사.
7. _____, 15 (1961.1-1961.12). 1981. 조선로동당출판사.
8. _____, 22 (1968.1-1968.9). 1983. 조선로동당출판사.
9. _____, 24 (1969.6-1969.12). 1983. 조선로동당출판사.
10. 김종화. 2019. 『[현안] 북한 수산업 현황 및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11. 김하영. 2013. 「동해 해양질서의 특징과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 『한국정치연구』, 22(2), pp. 101-124.
12. 김현용·박광범. 2006. 『남북한 수산협력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협경제연구원.
13. 남성욱. 2006. 「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협력 방안」. 『북한연구학회보』, 10(1), pp. 149-178.
14. 박구병. 1995a. 「미국포경선원의 한국영토 상륙과 한국인과의 접촉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38(2), pp. 123-162.
15. _____, 1995b. 『한반도연해포경사』, 민족문화.
16. 박근순. 1991. 『조선수산사(2)』, 공업종합출판사.
17. 박성쾌·심기섭. 1998. 『북한수산물 반입 및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 심재욱·이혜은·민원기. 2017. 「일제강점기 淸津의 팽창과 정어리 어업」. 『역사와실학』, 63, pp. 133-177.

19. 심재욱·하원호. 2017. 「일제강점기 동해 어족 자원의 수탈과 활용」. 『송실사학』, (38), pp. 229-262.
20. 심호진. 2009. 「동북아 수역의 수산자원 보존관리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40(2), pp. 71-103.
21. 안진희. 2020. 「북한 통치 수단으로서 경관의 활용 방식 연구: [로동신문] 현지지도 보도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pp. 151-170.
22. 양희철·권문상·김선화·김현주·남성모·노나린·박한산·박성욱·박은호·송환빈·이문숙·이미진·이주아·이창열·채기영·장덕희·장아름·전희진·조아영·황규원·Jin YinHuan. 2018. 『동북아 해양갈등 관리를 통한 남북한 해양정책수립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3. 여민경. 2010. 「환동해 지역 고래 생태계 파괴의 원인과 고래 생태계 보전의 가치」. 『아태연구』, 17(3), pp. 21-39.
24. 이주빈. 2017. 『일제 강점기 대흑산도 포경근거지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도서해양문화학 협동과정 석사논문.
25. 임채환·이다선·지성태·안동환. 2021.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분석: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25(2), pp. 111-154.
26. 장국종. 2010. 『조선수산사(개정판)』, 사회과학출판사
27. 장덕희·황규원·양희철·강길모. 2018. 「북한의 해양 수산분야 주요이슈 분석: ‘로동신문’의 보도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pp. 25-40.
28. 장수호. 2004. 「조선왕조 말기에 있어서 일본포경업의 입어」. 『수산연구』, 20, pp. 59-84.
29. 장창익. 1993. 「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남북한 수산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8(2), pp. 341-376.
30. 정인철. 2014.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 7, pp. 146-179.
31. 조수룡. 2020. 「해류, 명태 그리고 NLL-동해 명태 회유로의 이동과 남북한 냉전」. 『역사와현실』, (118), pp. 185-211.
32. 진희권·윤인주. 20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정책 연구-노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34(2), pp. 41-70.
33. 채수란. 2022. 「지도자별 북한의 동물성 단백질 생산 정책 비교연구」. 『아세아연구』, 65(1),

pp. 179-215.

34. 최증기. 2019. 「일제강점기 황해에서의 대형 수염고래류 포경실태 및 출현 계절에 대한 고찰」. 『바다』, 24(3), pp. 475-482.
35. 최현아·무어스 나일·젤리거 베른하르트. 2019. 「동해 해안 접경지역 생태분야 남북환경 협력 방향-고성군 해안의 바닷새 중 밀도조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31(1), pp. 93-115.
36. 허영란. 2014. 「집합기억의 재구성과 지역사의 모색: 울산 장생포 고래잡이 구술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2, pp. 373-408.
37. 홍민. 2018. 『김정은 위원장 최근 현지도도 행보 속 정책 코드 읽기』, 통일연구원.
38. 홍성걸·최수정·엄선희. 2008. 「북한 동해수역 입어협상의 선결요건과 추진방향」. 『월간 해양수산』, (280), pp. 27-42.
39. 황주희·윤인주. 2022. 「[로동신문]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수산사업소 정책 연구」. 『해양정책연구』, 37(1), pp. 81-114.
40. Berkes, F. 2005. "Commons theory for marine resource management in a complex world." *Senri Ethnological Studies*, 67, pp. 13-31.
41. _____. 2006. "From community-based resource management to complex systems: the scale issue and marine commons." *Ecology and Society*, 11(1).
42. Bridge, G. 2011. "Resource geographies 1: Making carbon economies, old and new."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5(6), pp. 820-834.
43. _____. 2014. "Resource geographies II: The resource-state nexu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8(1), pp. 118-130.
44. Campbell, L. M. 2007. "Local conservation practice and global discourse: a political ecology of sea turtle conserv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7(2), pp. 313-334.
45. Choi, M. A. 2017. "The whale multiple: Spatial formations of whale tourism in Jangsaengpo, South Korea."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49(11), pp. 2536-2557.
46. Dalby, S. 2000. "Geopolitics and ecology: Rethinking the contexts of environmental security." In *Environment and security: Discourses and practices*. London: Palgrave

- Macmillan UK. pp. 84-100.
47. Heé, N. 2019. "Tuna as an Economic Resource and Symbolic Capital in Japan's "Imperialism of the Sea"." In *Animals and Human Society in Asia*. Palgrave Macmillan, Cham. pp. 213-238.
48. _____. 2020. "Negotiating migratory tuna: Territorialization of the oceans, trans-war knowledge and fisheries diplomacy." *Diplomatic History*, 44(3), pp. 413-427.
49. Himley, M. 2014. "Mining history: mobilizing the past in struggles over mineral extraction in Peru." *Geographical Review*, 104(2), pp. 174-191.
50. Ii, S. A. 2013. "Whale food culture in Korea: A case study in Ulsan Jangsaengpo." *Senri ethnological studies*, 84, pp. 267-284.
51. Marston, A. 2019. "Strata of the state: Resource nationalism and vertical territory in Bolivia." *Political Geography*, 74, pp. 1-9.
52. Song, A. M., Scholtens, J., Stephen, J., Bavinck, M., and Chuenpagdee, R. 2017. "Transboundary research in fisheries." *Marine Policy*, 76, pp. 8-18.
53. Tatar, B. 2017. "Place-making landscape and materialities: Whales and social practices in Ulsan, Korea."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50(2), pp. 405-446.
54. Terry, W. M. 1950. "Japanese whaling industry prior to 1946 (No. 371)."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Natural Resources Section.
55.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1979. "Outlaw whaling: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United States Senate.
56. York, R. 2017. "Why petroleum did not save the whales." *Socius*, 3, pp. 1-13.
57. 국민신문고 해양수산부 답변자료. 2023. 「해양수산부의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의 입장 및 고래 관련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 (6월 7일)
58. 『한겨레』. 2005. 「한국 등 4국 밍크고래 공동조사 만장일치통과」. (6월 23일)